



최주섭

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상무이사

## 포장폐기물 자원화 촉진돼야

**근래**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생필품의 소비량이 늘어나고 부수적으로 쓰레기도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도시의 생활패턴이 빨라지고, 맛벌이 부부와 독신 직장인이 늘어나면서 간편하고, 신속하며, 위생적인 것을 추구하는 덕분에 패스트 푸드, 즉석 식품, 소형포장물 등이 인기를 끌게 되어 포장쓰레기가 상당량 발생되고 있다. 이에따라 금년부터 포장쓰레기는 환경당국의 요주의 대상이 되고 있다. 포장 폐기물이 되는 제품이나 용기의 원료 또는 그 제품을 만드는 업체 뿐만 아니라, 식음료업체 등 그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에 까지 따가운 눈총을 주고 있는 것이다.

포장재의 순기능을 보면 상품을 보호하고, 운반 및 보관시 온도변화로부터 보호하며, 그 취급을 쉽게하고, 외관을 높혀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충분한 대응책이 없는 한 갑작스런 감량화, 즉 사용억제는 생산, 유통자,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타격과 불편을 준다. 따라서 사용억제를 중심으로 하는 감량화시책은 순기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제 필수품이 되어버린 승용차를 대기오염과 교통지옥의 주범이라는 이유로 승용차 생산, 주행을 갑자기 줄여서는 안되는 것과 같다.

그대신 대체품을 개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우선 환경적으로 기존 제품보다 더 친화적이어야 하며(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제품별 환경적성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기존 제품의 제조업체와 사용업체의 시설대체 능력도 감안해야 한다.

한편 포장재의 역기능은 사용이 끝나 불용물로 버리면 쓰레기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들을 매립한다고 했을 때(현재 국내 발생 폐기물 중 80%가 매립된다) 그 재질에 따라 역기능은 다르다. 예를 들면 잘 썩지만 그대신 침출수가 많이 나와 하천을 더럽히는 종이류가 있다. 거의 썩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 유리나 합성수지류에 있어 폐수는 나오지 않지만 매립후 그 토지의 타용도 이용 가능 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 것이다. 따라서 포장재의 역기능은 어느 재질이든지 좋을 것은 없다.

그렇다면 포장재 쓰레기의 최적 처리 대안은 무엇일까? 바로 회수·재활용이다. 적량 사용하고 이를 다시 회수하여 재생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포장재로 쓰이는 재질은 합성수지류, 유리병류, 그리고 종이류가 있다. 이들은 유사 용도로 다시 쓰거나, 다양한 재생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액상 가스상 연료(합성수지류)로 회수, 또는 소각하여 폐열을 회수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금년 6월 대통령자문기구인 세계

화추진위원회는 『21세기 환경비전』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는데 그중에서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순환형 사회구조의 형성'이라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이어서 세계환경의날 기념식에서 김대통령도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강조하셨다.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폐기물 문제의 처리방향을 정확히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

포장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내실화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필요충분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재생제품의 시장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신재로 만든 제품의 가격 덤핑이나 재생제품이라 하여 공공 또는 개인소비자가 외면하면 영세한 재생업체는 도산되기 일수이다. 최근 우유팩으로 만든 국내 재생화장지 업체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그러한 것에 연유한다.

둘째, 재생업체의 적정이윤이 보장되어야 한다. 재생원료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불안정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이윤폭이 줄어들어 경영을 압박한다. 때로는 재생제품의 계절적 수요 변동에 따라 재생원료의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수집된 재생원료에 불순물이 혼입,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기 위한 인건비 부담이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도 있다. 더구나 3D 업종에 속하여 적정 인력 확보도 용이하지 않다.

셋째, 재생제품의 새로운 용도가 계속적으로 개척되어야 한다. 재생원료의 재활용율은 현재 시점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정해진다고 봐야 한다.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폐지가 종이제품으로, 파유리는 유리제품으로, 폐합성수지류는 합성수지제품으로 재활용되었으나 이러한 용도로는 제품의 순기능 확보 기술, 신재 제품과의 경쟁성 등의 이유로 그 재활용 한계까지 온 경우가 많다. 이의 타개책으로 새로운 용도의 개발이다. 합성수지류의 경우 경량골재, 접착제, 액상 가스상 연료, 소각후 에너지 회수 등이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되고 있다.

위와 같은 조건의 충족을 위해서는 자원 재활용을 시장논리에 맡기기 보다는 적절히 정부가 개입해야 할 것이다. 재생마크상품에 대한 홍보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재생원료의 가격 안정보전금 지원, 장기비축시설의 확보, 전처리설비를 포함한 재생설비 구입비 세제 및 융자 지원, 신용도 및 설비개발비 지원 등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시책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한편 회수 재활용체제 구축을 위하여 회수책임은 정부가, 재활용 책임은 포장재의 원료 생산자, 포장재 생산자, 포장재 이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이 점진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굳굳하게 견뎌온 폐자원 재생업체들이 긍지와 보람뿐만 아니라 독자경영을 유지하도록 사회 각계 각층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싶다. ☐